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황 경 식 의원

자유선진당 중구 제1선거구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성공적 활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도청사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은 1932년 당시 공주에서 대전
선화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원도심 상권과
생활권의 성장동력이자 거점지역으로서 대전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실에서 대전 원도심지역은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투데이에서도 “도청부지 활용 탁상공론”이라는 타이틀로 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염홍철 시장께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대전시의 시정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총 121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약 4만여 명의 대전지역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주변 유동인구가 1일 2,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에 따른 인구유출과 상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은 커녕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방관하듯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현재 진척율이 5%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계획을 집중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획안이 지연되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는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시민들 간 분열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역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박물관과 함께 문화예술과 관련된 복합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인단체는 과거 원도심에 위치했던 대전시청과 법원청사 등이 둔산으로 이동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하면서 매우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 부지에 경제성을 고려한 상업적 시설을 유치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학연합교양대학 유치와 함께 충남도청으로의 중구청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입장은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예술·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청 이전이 앞으로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고 결정을 해야만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도청 부지 활용계획이 결론 없이 계속 지연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써 기본계획안이 나왔어야 옳고, 벌써 대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유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상권 쇠락 등에 대비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 일정에 맞추어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홍철 시장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서서는 내년 12월에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사와 충남경찰청 부지확보와 활용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으며 테미도서관 운영과 관련 시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황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시는 “방관해 왔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받기 위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경찰청은 부지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도청은 도, 경찰청은 국가 그래서 두 부지를 다 할애 받았을 때의 안과 도청부지만 할애 받았을 때의 안을 따로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특히 중구에 지역구를 둔 권선택 의원님과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황 의원님도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와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했고 그때도 이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충남도청사의 역사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제안하셨는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안을 공표하면 국책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가 이렇게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표하면 무상양여가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도 고위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과장급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은 이것이 시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알려질 때는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TV토론회도 과장이 나가고 공청회도 과장이 나간다는 저희들의 전략적인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관련 원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단계별로 마련하여 공동화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 또 대전시에서 준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부지 활용은 원도심활성화와 연계해서 대전발전 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기간이 이달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확정된 안을 발표할 때 국책사업과 연계한다든지 무상부지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전략적인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현재 공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주된 방향으로 하되

신도심과 차별화된 것은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박물관, 창작공간, 문화예술거래소, 전시공연장, 교육, 연구공간, 엔터테인먼트공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박물관을 한다, 창작공원을 만든다, 문화예술거리를 만든다 할 때도 그것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대홍동에 대학생 중심의 연합교양대학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대학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도청이 이전되는 2013년 이후에는 바로 그것이 도청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시민강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민간건물에 임대하고 있으나 그것도 만일 이전하여 공간이 생기면 바로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문화동 연정국악원 자리에 대전문화예술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하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신개념의 골목길 재생사업, 중교로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재창조사업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흥동 대중문화예술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설, 휠체어 통로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또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 및 원도심지역 우선 추진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경식 의원**

둘째, 현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청 부지 활용방안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중부경찰서가 충남지방경찰청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중부경찰서가 현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구상안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홍철 시장

두 번째,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 그리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전시의 복안이 무엇이나?” 이렇게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사 부지는 충청남도 소유이고 경찰청 부지는 중앙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충남경찰청 건물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것을 매매를 하거나 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충남경찰청 부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경찰청 부지가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할 때 저희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정부와 협의해서 충남경찰청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하기에는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민간에 매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 중의 하나이지만 민간이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그 다음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황경식 의원

셋째,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청사와 충남경찰청의 부지매입비만도 약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고의 시나리오로는 충남은 도청사 이전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대전시는 도청사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는 동시에 충남도청사 활용 재원 역시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역 정치권과 충남을 아우르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청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가 전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를 이끌어 냈고, 대구가 경북도청사를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전시도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을 국책사업으로 격상시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 국비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염홍철** 시장

세 번째,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공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주는 아니고 대구하고 저희들은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장 간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국비확보 또 무상양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 황경식 의원

넷째, 충남도청 부지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전시의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방안이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주변 상권 그리고 유관기관을 아우르면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대전의 역사적 출발점이며 정체성이 새겨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은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인구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와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대전시가 구상 중인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주변의 문화예술 자원들을 연계하여

신도심에는 없는 원도심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등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유입 촉진을 위하여 도청 부지를 포함한 원도심 전체의 물리적 재생과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온 각종 원도심 활성화사업들과 중앙로 재창조사업들을 새롭게 재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도심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충남도청 부지활용을 포함한 전체 원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홍철 시장

네 번째, 충남도청 이전 부지활용을 포함한 전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며칠 전에는 대덕구, 중구, 동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 또 새로운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서구, 유성구 지역은 민간자본 및 기업 유치로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은 시가 직접 공공투자를 해서 확대해서 활성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세권의 풍류센터 건립,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이 주된 사업이고 이것을 201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청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중앙로 일대의 주차장, 교통실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중교통 접근 문제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인근 상인들과 대구에 우리 담당국장과 같이 가서 견학을 하면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덕구, 동구, 중구의 골목재생사업 그리고 또 대덕구에는 신탄진 인입선 이설 조기 가시화, 동구에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중구에는 중촌지역 환경개선, 생활체육 집적단지 조성 이런 것 들을 추가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경식 의원

다음은 테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인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취미나 교양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 및 문화공간의 활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또한 막중해져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테미도서관의 운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테미도서관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테미도서관의 대지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혼재되어 있고, 건물은 시 소유이며,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가칭’ 사정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원도심 대흥동의 테미도서관에 대한 폐관방침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국유지 매입 후 교육청 소관 폐교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되

관리는 현행처럼 교육청 평생학습관 분관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청은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직접 주관하여 시청, 교육청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구청은 중구청대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연간 20여만 명이 이용하고, 1일 평균 669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테미도서관을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물려설 수 없다는 입장만을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원, 검찰청, 대전시청, 대전지방경찰청이 다 빠져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원도심의 도서관까지 폐관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학생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자리를 맡으려고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줄서서 기다리던 정겨움도 서려있는 정말 의미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더 이상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 정말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민들을 불모로 하는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설명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테미도서관의 폐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미도서관은 정상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의 고집스러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테미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타협점을 도출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광역시가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염홍철 시장

마지막으로 테마도서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민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폐관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이런 질책을 함으로써 성의를 더 갖고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폐관은 있을 수도 없고 폐관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시의 입장이고 아마 교육청의 입장일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만 다만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대표도서관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 같은, 그 다음에 지역공공도서관은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기본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는 것이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에도 그런 일이 있고, 많은 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해도 도서관 건립에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원칙을 따지지 않고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도서관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더더욱 지금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역사가 있는 테미도서관을 존치한다는데 어떤 기관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중구청이 공동의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테미도서관 존치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지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신호 교육감

존경하는 황경식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의 운영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경식 의원님께서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중구 안영동에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가칭 사정도서관을 설립하면서

테미도서관을 도서관 소유주인 시청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한 이유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주인 시청에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 폐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관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관은 아니고요, 운영은 지속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든지 하는 것이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건물 소유주인 시청이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인 구청들이 전부 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에 깔려있는 문제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미도서관은 1961년 11월 7일에 은행동에 대전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해서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과거에 문교부로부터

문화공보부가 분리 독립함에 따라서 1970년 1월 26일 문교부의 직제가 전부 개정되었는데

분리된 문화공보부에서는 도서관 운영업무를 함께 독립해서 가져오지 않고 분리 독립되면서 그 업무만 기존의 문교부가 하도록 그대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제개편방침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의 운영만큼은 문교부 지금의 교육과학부 산하의 관련 기관에서 하도록 업무 조정됨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1970년 7월 31일 도서관 운영을 우리 교육청에 이관했고 1979년 12월 22일에 현재의 대흥동 자리에 테미도서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1년 3월 8일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변경되어서 그 이후에 시청도 갖게 되었고,

시청을 포함한 구청 모든 기관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실소유주인 시청에 반납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테미도서관은 현재 사서직 7명, 사무실직원 3명으로 총인력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인건비 5억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국유지고 관리는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는 시청이고 저희들이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데 건물만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받고 있고 부지사용료라든지

여타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비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의 모든 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무엇이나면

첫째는 건물 임대사용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임대기간이 완료됩니다, 시청으로부터 이 건물 임대기간이.

거기에 맞춰서 소유주와 경영자가 따로 되어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이원화로 항상 거기에 크지 않은, 잦은 이견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제 시청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원래 건물의 소유주인 시청에 돌려줘서 건물 소유와 경영의 이원화를 해결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고

현재 또 시청에서 경영하는 것은 한밭도서관 하나니까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서비스 차원에서 테미도서관을 경영해 왔는데

그것을 시청에다 돌려주는 대신, 반납하는 대신 테미도서관 옆에는 한밭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테미도서관 지역의 주민들은 한밭도서관 으로부터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중구 내의 안영동은 전혀 문화, 교육,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테미도서관에서 철수하는 대신 같은 중구 지역인 구민들이니까 거기에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하고 인력도 거기로 옮겨가고 모든 것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전시민 또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와 경영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또 제대로 원활하게 경영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같은 중구 내의 변두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거기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은 이미 평생학습관 산하의 테마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산하에 도서관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현대화시키고 디지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한테도 완전히 개방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수백 개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칭 ‘사정도서관’을 만들면서 임대계약 만료가 되는 2012년, 내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원 소유주인 시청에 돌려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시청과 우리 교육청에 서로 협의할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사정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테미도서관도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하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은 둘째입니다.

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정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텐데 거기에다 테미도서관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확보에는 우리가 법상으로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거기에 확보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은 원소유주인 시청에 계약도 만료, 임대기간도 만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돌려줘서

한밭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시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한밭도서관 하나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은 대전에 각 구청들이 도서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한 동구청이 8개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4개, 유성구청이 4개, 대덕구청이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구청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구청이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경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과 구청이 상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재 중구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원치 않는 이유는 중구 소재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 제일 큰 것,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두 개가 다 중구 내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중구청에서는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깐 그래서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영하기 싫어서, 서비스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충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중구청이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냐를 생각해서

고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